

## News & Issue

### 뉴스와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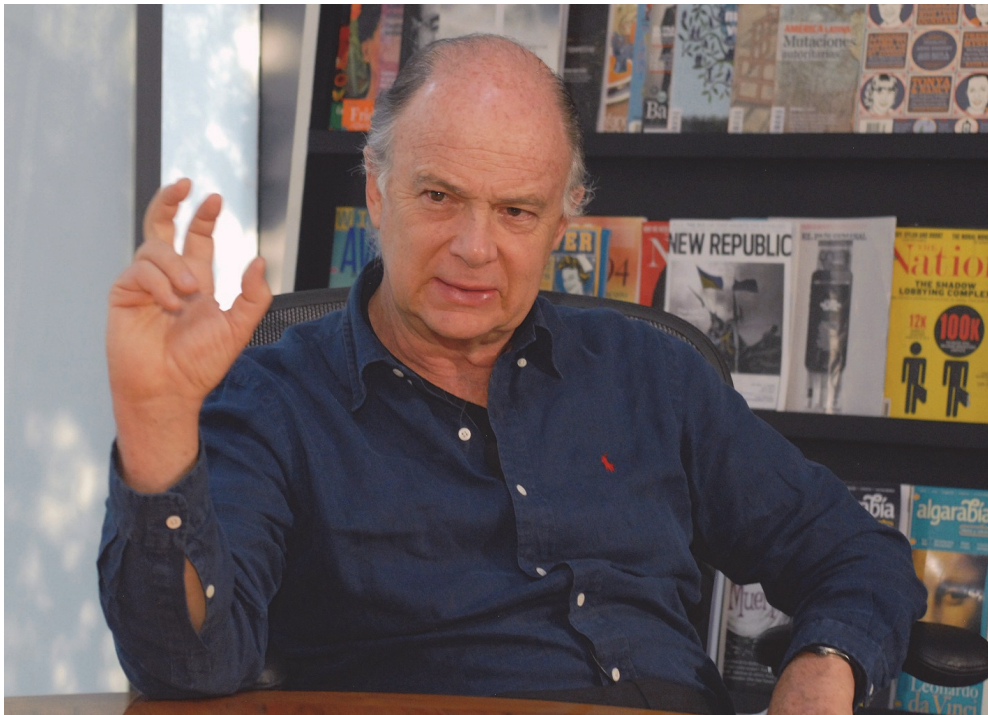
## 멕시코의 불처벌 범죄<sup>2)</sup>

엔리케 크라우세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게 삶이지. 삶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네.” 오래된 노래의 이 후렴구는, 목숨을 위협하는 폭력을 매일같이 마주하면서도 처벌을 기대할 수 없던 수많은 멕시코인의 고통을 나타낸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의 60%가 강도 또는 납치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표명했다. 사람들은 재산이나 목숨을 잃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거나 가해자를 처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무도 신고하지 않는다.

불처벌 범죄 문제는 역사가 깊다. 근본 원인은 정의 구현에 관련된 기관이 20세기 내내 무력했던 탓이다. 해당 기관을 강화할 필요가 없어보였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멕시코혁명을 들 수 있다. 1910년에서 1920년 사이 수십만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불처벌 범죄의 긴 궤적을 남긴 멕시코혁명은 집단 기억에 끔찍한 신화로 각인되었다. 사회적 불의 때문에 폭력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혁명을 기반으로 태어난 국가의 주요 의무는 불의를 바로잡는 것이었다. 그 결과 사회 정의라는 개념이 탄생했고, 사람들은 이 개념을 정치적 지지를 받는 대가로 부(우선적으로 토지이지만, 일자리와 신용대출, 보조금, 개발허가권도 포함한다)를 분배하는 능력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사회 정의 개념이 강화되면서 정의

2) 출처: [http://elpais.com/elpais/2015/11/06/opinion/1446830205\\_420907.html](http://elpais.com/elpais/2015/11/06/opinion/1446830205_420907.html)



엔리케 크라우세 (출처: <http://guardagujas.lja.mx>)

본연의 의미가 훼손되었다.

멕시코 정부는 매수, 반체제 인사 탄압, 범죄자 통제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동맹을 맺거나, 극단적인 경우 제거하는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파급력이 없는 문제에는 취약했다. 범죄는 주(州)나 시 차원에서 다루었지만, 사건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 대통령이나 검찰총장(예나 지금이나 대통령 휘하에 있다)이 국민투표로 선출된 지방당국자를 해임하겠다고 협박했고, 그러면 마지못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잦았다. 대통령이 정점에 있는 피라미드식 권력구조는 효과가 있었다. 1930년부터 20세기 말까지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살인 65건에서 10건으로 감소했다. 대통령의 권한은 합법적(그리고 불법적) 폭력을 행사하고 관리했다.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했고, 사람들 또한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정의가 정치화되면서 장관, 검찰, 수사관, 각 분야 전문가, 판사 등 실제로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직업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경찰과 교정제도 또한 전근대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법원마저도 20

세기 말까지 행정부의 부속물이었다.

이러한 과거를 짚어진 상태에서 우리 멕시코인이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 특히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제도, 인력, 법률이 없는 상태로 우리는 21세기의 첫 십년으로 들어섰다.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가 확립되었으니 평화와 질서와 법치의 세계로 향하는 문이 열릴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정치 제도의 중추 역할을 하던) 대통령의 정치적 독점이 타파되고, 모든 이유로 환영받은 민주화가 이루어지자 원심력이 작용하여 지방정부가 중앙권력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중앙권력의 압력이 사라지자 지방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연방기관(주로 육군과 해군)에 떠넘겼다. 연방기관은 이 엄청난 과제를 수행할 역량이 부족했고, 이를 떠맡기를 꺼려했다.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것이기에 당연한 반응이었다.

멕시코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여러 가지 일이 함께 진행되었다. 콜롬비아 마약밀매단의 약화와 그에 따른 멕시코 마약밀매단의 준동, 미국 내 코카인 소비 증가와 가격 상승, 2004년 부시 대통령이 발령한 무기판매 금지 조치의 해제 등이다. 2007년 칼데론 정부는 마약밀매단이 장악한 지역을 평정하려는 최후 수단으로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마약밀매단 사이의 충돌, 마약밀매단과 연방수사국(또는 지역 경찰) 사이의 충돌을 격화시켰을 뿐이고, 때로는 마약밀매단원과 손을 잡는 수사요원도 등장했다. 그때부터 그치지 않는 폭력의 물결이 마약 거래를 넘어서서 범죄에 관련된 모든 국면으로 확산되었다. 납치, 강탈, 강도, 살인, 송유관 유류 절도, 인신매매 등 온갖 성격의 범죄가 증가했다.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에 살인발생률은 10만 명 당 9명에서 24명으로 상승했다. 폭력이 폭풍처럼 밀어닥쳤다. 현재는 지표상으로 조금 감소하기는 했지만 폭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까? 마약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29%)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다수는 아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역사적 조치를 취했다. 마약 사용을 합법화한 것이다. 70년대부터 빈곤층 대상의 소규모 용자와 현금 지원 등 실용적인 제안을 해온 칼럼니스트 가브리엘 사이드는 교도소 운영부터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사이드는 다음과 같이 질문한

바 있다. 멕시코 정부가 영토의 극히 일부인 교도소조차 통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머지 영토를 통제할 수 있겠는가? 멕시코에는 교도소 416곳과 죄수 244,960명이 있다. 이 중 154군데는 수용인원 한도를 넘었다. 미결수의 비율(42%)이 높기 때문이다. 교도소는 지속적으로 탈옥이 발생할 정도로 허술하고, 죄수와 당국이 구성한 공동정부라 해도 될 만큼 부패했을 뿐 아니라 폭력적이고 위험하다. 또한 범죄 교육의 온상으로, 대부분의 사기 전화도 이곳에서 걸려온다. 사이드의 제안을 살펴보면, 경범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의 법률적 구제방안 강구, 교도소의 시설 및 인력과 행정에 대한 국제기구의 감찰, 전화통화 감시,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 2회 평가, 인권위원회의 체계적인 조사 등이다.

그러나 사법개혁에 필요한 법안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2012년의 개혁헌법에서는 빠르고 투명한 재판을 위한 구두심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이미 몇몇 주에서 시행되고 있고, 2016년 중반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2018년에는 독립적인 연방검찰이 창설될 예정이다. 멕시코에서는 다양한 독립 기관이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검찰 지배를 정말로 포기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만약 사법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큰 진일보이다. 독립적인 연방검찰이 무능하고 각종 비리로 얼룩진 경찰을 포함해 각급 공무원을 다잡는다면 국제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독립적인 연방검찰이 자리를 잡으려면 한 세대가 걸릴 것이다. 멕시코의 개혁은 대통령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 또한 각종 제도와 인력과 업무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미디어와 학교, 대학교도 광범위한 시민교육과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멕시코에서 삶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보다 시급한 문제는 없다.

[윤종은 옮김]

엔리케 크라우세 — 멕시코의 역사가이자 수필가. 옥타비오 파스와 함께 『부엘타』지를 발간했으며, 현재는 월간 『자유 문예지』의 주간(主幹)이다.

윤종은 —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석사과정